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용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 투자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연구 생산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정부 출연연구원의 미션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한 번 과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반성하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그 분야에

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

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 연구보다는 과제 수주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한 우물 파는 연구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한 우물 연구'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지 않으며 연구자들의 투철한 열정과 도전 의식이 함께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출연연이 산업화 초기에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산업과 대학의 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돼 세계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상황에 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연구원들은 아직도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 성과는 기업의 니즈나 시장 원리와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고, 연구는 90% 이상 성공하는데 시장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연구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인류의 삶 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하며 냉철한 철학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 정책은 정부 관료가 좌지우지하지 마라. 연구 개발 기획 과정에 정부

관료의 의견이 70%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관료가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기획 및 예산 집행을 좌지우지한다. 형식적으로는 정책에서 공무원 권한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책 수립 과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근본적으로 과학 정책 수립, 연구 기획, 예산 집행은 전문가, 민간인, 연구자에게 맡겨 놓고 정부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감사 제도를 개선하고 위반자는 일벌백계하는 정책을 펴라. 연구비 부정 사건이 한 번 생길 때마다 새로운 규정은 점차 늘어나서 대한민국 연구계는 늘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비 부정이나 할 때 감사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연구자들을 일단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방법은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0.5% 이하의 연구 부정 때문에 99.5%의 연구원이 감사와 행정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감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과학자들의 자긍심을 살려 줘

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수한 연구원들은 정년에 상관없이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를 확대해 많은 우수 연구원들이 1998년 외환 위기 전과 같이 65세까지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길 희망한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과학자는 중국의 사채처럼 정년 없이 종신 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능한 연구원에 대한 퇴출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자. 정부, 연구계, 지자체, 교육계, 금융계 등 모든 분야에서 뒤질세라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4차산업혁명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너무 많다. 4차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에 대해 너무 조금중에 휘말려 창조 경제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4차산업혁명의 개념과 방향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 주도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연구를 통해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금씩 쌓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社說

문화전당 안정적 운영 위해 정원 늘려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이 7월 한 달간 직원들의 무더기 공백으로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시아문화원에 따르면 전체 직원 160명 가운데 무려 70여 명의 근로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들은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운영 및 문화사업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이다.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0개월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직원이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 운영 주체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문화전당 운영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이다.

아시아문화원이 현재 인력 충원을 위해 공모 절차를 밟고 있으나, 문제는 오는 8월부터 신규 인력을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어서 7월 한 달 동안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근로계약 만료 대상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암암리 공채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공백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어

조직이 어수선한 상태라고 한다. 아시아문화원이 계약직 인력을 대거 채용한 것은 정규직 정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측은 애초 정부에 문화원 필수 인력으로 200여 명을 요구했으나,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규직 정원을 배정받았다. 문화전당 측은 정부에 정규직 정원 100여 명을 요구했으나, 32명만을 배정받아 겨우 조직을 꾸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 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만큼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국가 재정상 일시에 두 기관이 요구하는 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와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필수 인력부터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앞당기려면 먼저 문화전당을 운용할 인적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허위 분양광고 안 속으려면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허위 과장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 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돼 지정 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조합 측에서 시범비 상상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해 되지 않아 인가가 나지 않았

음에도 마치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조합도 있다. 또한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 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고 해서 달력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세세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사업의 당사자는 조합원로서 토지 매입 등 조합의 사업 추진 모든 단계가 조합원의 공동 책임 하에 추진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을 것이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광주교구 사무국장

한 영국 소년이 여름에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 호수에 놀러갔다가 익사 직전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를 본 시골소년이 얼른 달려와서 위험을 감수하고 영국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영국소년의 아버지는 너무 고마워 시골소년에게 꿈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해서 인간을 병에서 고쳐주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시골소년이 의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시골소년은 1928년 인류 최초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194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 경입니다. 어릴 적 플레밍 경이 구해준 영국소년은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대통령과 함께 소련총리와 회담하러 갔다가 폐렴에 걸렸지만 플레밍이 발명

부메랑은 반드시 나에게 날아온다

한 페니실린을 통해 완쾌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우연이다 할 수 있겠으나, 진리적으로 보면 참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공 심은 대 공 나고, 팔 심은 대 팔 난다'라는 속담처럼 자신이 도움을 준 만큼 만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요즘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재판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권력의 힘이 강해질수록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올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는 시기도 앞당겨지지 마련입니다. 사회 고위층들이 이 사건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사회에 복을 짓고 있나, 죄를 짓고 있나'하고 말입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인과보응의 부메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중이 약한 경우에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뿌린 상추씨는 화단의 풍성한 수확물이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사드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번지면서 국론분열과 대외에 엄청난 사회적 손실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졌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드가 국내에 배치되지 않았던 시기가 전쟁에 대한 위협이나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덜했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상황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군비증강과 선제타격론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도 우리가 됩니다.

사드는 전쟁의 씨앗과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화나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상대국과 협상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따라 전쟁이 미군의 생명을 보호코자 미국의 자국적이익에 의해 방어무기라는 이름으로 전쟁무기를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미사일이 북에서 남으로 날아오는 순간, 혹 사드로 미사일을 한발 맞추었다 한들, 이미 전쟁의 화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할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사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씨앗인 사드를 철수하고 평화의 씨앗을 지금부터라도 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씨앗은 다만 일방적인 지원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국들과의 협력 속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동북아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철수배치를 주도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야합니다. 정당하고 떳떳한 절차를 통해 제2의 4대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6·10항쟁 30주년입니다. 3·1 정신, 5월의 노래, 6월 함성의 씨앗이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꽃이 피게 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쟁의 씨앗이 아닌 평화의 씨앗이 뿌려져 반드시 그 결실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합니다. "30,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때로 다시 돌아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그 소원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지금부터 정성과 최선을 다해 선행하시고 열심히 살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후의 불행한 역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의 씨앗인 한반도 사드배치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화의 부메랑을 지금 날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메랑은 반드시 다시 나에게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기 고



김영진 지역미래연구원 원장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두 간격이 시간적으로 30년이다. 공간적 30년은 훨씬 더 크게 변화했다. 오늘을 사는 40대 중반 이전 세대들에게 6월항쟁은 벌써 전설이다.

그러나 두 시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변화와 혁명의 시대라는 공통의 특징이다. 농촌에서 도시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두환 군사독재를 물리치자고 일어난 국민의 물결이 6월항쟁이 되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나라에서 박근혜 부패정권을 물리치자고 일어난 국민의 물결이 촛불국민항쟁이 되고 민주정부를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변화와 혁명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는 6월항쟁의 주역들이 오늘 민주정부시대의 주역들이다. 87년 6월 부산 법일동 성당에서 행진하며 나오는 당시 재야인사 문재인 변호사의 모습을 흐릿

87년 6월항쟁과 2017년 민주정부의 과제

한 사진에서 발견한다. 대통령이 6월항쟁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장, 수석 등 비서진들이 특히 6월항쟁 세 대들이다. 인적연계로 보아 두 시대는 강력히 연결되어 있다.

셋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시기 개헌을 약속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곧바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추가로 넣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월항쟁의 구호는 '민주헌법쟁취'였으니 30년 후의 새로운 개헌 추진은 두 시대가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가는 변화의 정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연결과 함께 두 시대의 과제 또한 같다. 정권교체와 민주개혁이 그것이었다. 민주개혁도 정치개혁만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6월항쟁후 야권의 분열로 정권교체는 실패하고 민주개혁은 훗날의 과제가 되고 말았다. 직선제 개헌 쟁투는 항쟁의 그나마 남은 유산이었다.

이런데는 달랐다. 우리 국민은 촛불항쟁을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 정권교체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직폐정산과 민주개혁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30년 전 미완의 6월항쟁은 완성될 것인가? 2017년 민주정부는 성공할

것인가?

그 해답은 국민에게 있다. 6월항쟁 이후 야당은 국민을 버린 권력다툼으로 시민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촛불 국민을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에 앞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의 철학과 틀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 한 민주개혁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재벌과 뿌리 깊은 기득권세력이 끊임없이 개혁을 방해한 역사는 동서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보는 과거가 아닌 현실이다. 국민이 보이지 않을 때 반동은 정확히 때맞춰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을 제도와 관행으로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 30년 전에는 그런 힘과 경험이 약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를 거쳐 오면서 이제는 경험과 인재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이번 정부는 개혁을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완성할 가장 좋은 대통령의 성격과 정치여건을 가졌다 할 수 있다. 그 일차적 완성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개헌이다. 개헌은 6월항쟁 이후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여건을 반영하는 국민주권과 평등, 권력분산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한국사회에서 한 단계 극복하며 선거제도개혁과 함께 민주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변화와 개혁주체를 분명히 세우면서

정치연정을 실현하는 일이다. 6월항쟁 시 변화의 주체는 중간층이었고 점차 노동자와 농민으로 확대해갔고 개혁중심층이아와 종교계였다. 지금의 시대는 30년과 매우 다르다. 사회와 정치의 다원화가 이뤄지고, 개혁중심도 재야라기보다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사회로 변화했다.

달라진 사회에서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는 차우전 이념과 계급이나 세력이 아닌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하게 이뤄진 시민사회의 집단지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분법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주체를 세우내는 한편 앞으로 법과 제도를 세우는데 있어서 각 정당 정치세력과의 포괄적인 연정과 어젠다별 협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새정부의 의욕과 지지가 강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현실에 부딪칠수록 이 정치 패러다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87년 6월항쟁과 오늘의 민주정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역사적 미완인 민주개혁의 완성이라는 과제로 계승되고 있다. 그래서 30년 전 6월항쟁의 정신과 그 한계를 오늘에 다시 세겨 6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꼭 성공시켜야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 시민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한다.

無 等 鼓

중세 영국과 프랑스 국민은 '왕의 몸 에 손을 대면 중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로열 터치'(Royal touch-왕의 접촉) 한 번이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이야기인데, 각종 자료에는 '왕좌에 앉은 군주가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는' 모습이 글과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다.

'로열 터치'에 열중한 영국 왕 찰스 2세는 죽을 때까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록에 따르면, 왕은 창으로 무장한 호위 병이 경호하고 성직자와 궁정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열 터치'를 시행했다. 단정 아래 왕좌에 앉은 왕은 무릎 꿇음으로 다가온 환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접촉'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학사기인 존 코디 퍼퍼슨은 당시 이뤄진 '로열 터치'에 대해 "자신들의 오두막집에서 관청 밖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주체를 세우내는 한편 앞으로 법과 제도를 세우는데 있어서 각 정당 정치세력과의 포괄적인 연정과 어젠다별 협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새정부의 의욕과 지지가 강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현실에 부딪칠수록 이 정치 패러다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 영국 군주들은 진지하게 이를 시행했고, 영국인들도 앤 여왕이 마지막 으로 '로열 터치'를 실행한 1714년까지 거의 700년 동안 '신체적 접촉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도 사들10세가 1824년 자신의 대관식에서 121명의 환자를 접촉할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됐다.

물론, 지금에야 허무맹랑한 미신 또는 흔한 물리치료의 하나쯤으로 치부될 만한 행위다. 하지만 당시엔 '왕의 기록에 따르면, 왕은 권력은 신이 내린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이 인정되는 분위기여서 '로열 터치'는 '신이 왕을 통해 환자를 치유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환자들은 왕을 통해 신과 접촉한 셈이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 경호'를 추구하면서 가는 곳마다 대통령의 손을 잡거나 함께 '셀카'를 찍으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으로 이끌려 온 환자들이 경험했던, 왕과 개인적인 접촉을 했을 때의 기운을 북돋는 감동, 그리고 샘솟는 영감의 위대함이었어"라고 기록하고 있다.

1045년 참회왕(the Confessor) 에 드워드가 '왕의 접촉'을 처음 시작한 /홍형기 사회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